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본회의, 재석 의원 290명 전원 찬성
미성년 지원·추모공원·추모관 조성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도 처리
재의요구법안 8개중 방송법만 가결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준비기간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여객기

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지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

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 있던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은 특별법 통과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일부 유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
또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주주 총실의무’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예군특검법 등 8개 법안 가운데, ‘수신료 통합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만 가결되고, 나머지 7개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혁신당 등 8개 정당, 정책연대 모색

공동정책 토론회 개최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이 검찰 개혁 등의 과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어 ‘정책연대’를 모색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함께 ‘공동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민주당은 6월 대선 승리로 빛의 승리를 완성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사유화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했고 언론과 노동을 탄압했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급기야 초유의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총까지 겨눴다. 내란수와 윤석열

은 파면됐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다시 만날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우리가 광장에서 12·3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엄동설한에 아스팔트 위에서 빛의 혁명을 이뤘다”며 “내란수와 윤석열 파면까지 이끌어냈다. 이제 두 번째 큰 산은 대선에서 승리해 민주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서 그야말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잘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도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켜내는 대연합으로 압도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첫 걸음”이라며 “정권교체는 단순히 세력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는 예언선이 되겠다. 내란을 끝장내는 쇄빙선으로 계속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尹 대통령실·관저 줄속 이전… 특검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특검을 촉구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줄속 이전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무리하게 옮기고 본인의 거주 공간을 한남동 공관촌으로 옮기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24시간 함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조성했다”며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모아 회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감행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헌법·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8개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에 496조원이 든다고 했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백승아 의원실에 제출한 것을 보면 소요된 예산은 3250억1600만원으로 나온다”며 “예산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권교체 후에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500가지 1000가지로 (의혹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주철현 “예산·도선업, 해운항만업에 포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사진)은 17일 예산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예산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다.
도선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다.

서울=김선욱 기자



1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나경원 의원, 양향자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힘, 1차 경선 토론 대진표 확정… “이재명 꺾을 것”

A조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B조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은 1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A조에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가, B조에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가 각각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막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

앙당사에서 1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회 조를 결정했다.
후보자들은 각자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신의 조와 번호를 선택했다. 안철수·김문수·유정복·이철우·나경원·양향자·한동훈·홍준표 후보 순이다.
각 조마다 다른 토론 주제를 두고, 본인의 상대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A조의 주제는 ‘청년미래’ 이고, B조는 ‘사회통합’이다.
가장 먼저 안 후보가 A조(2번)로 지정된 자리에 앉았고, 이어 김 후보(3번)와

유 후보(1번)도 같은 조를 택했다.
계속해서 이 후보(1번)와 나 후보(2번)는 B조로 향했다. 양 후보가 A조(4번)를 선택하면서 A조 인원이 모두 채워졌고, 남은 B조는 한 후보(4번)와 홍 후보(3번)로 채워졌다.
A조와 B조의 토론회는 각각 오는 19일과 20일 하루씩 나눠서 열린다.
이후 21~22일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26일 DJ센터서 호남권 경선 합동 연설회

권리당원·전국대의원 23~26일 투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경선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투표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ARS(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투표는 23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9시, 26일에는 오전 9시부터 합동연설회 종료 30분 후까지 참여할 수 있다. ARS 투표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 차례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참여 가능하다.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두 번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투표하며,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권리당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할 수 있다.
전국대의원 투표는 26일 합동연설회

당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합동연설회는 26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21일부터 27일 사이 이를 동안 별도 일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권역별 순회경선에서는 권리당원 득표에 따른 순위만 발표한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투표 50%를 합산해 선출된다. 권역별 경선 결과와 국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마지막 경선일인 27일 수도권 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정성현 기자

법원, ‘피고인尹’ 21일 공판 법정 촬영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재판관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한편 오는 21일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형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